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주제별 인사말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과 정책:

'92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인류의 존속문제를 둘러싸고 지속가능발전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당시 지구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과제로 환경문제가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의 WSSD에서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균형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환경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정책, 개발추진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정부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제고하는데서 비롯되며 유엔의 권고에 의해 '92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 21> 실천기구에 의한 의제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실천 실체인 지방의제21 실천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운영으로 실효성 제고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는 국기별 의제21의 실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있다. 이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은 지방의제21(WSSD이후 지방행동 21)를 제도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하고 지자체별 실천기구를 통합하고 있는 전국협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가버넌스체계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정책 확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확대는 정부 혼자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대안으로 국제적(을) 정착단계에 있는 정부체계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 가버넌스체계이다.

지방의제 21 실천기구의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파트너십의 외형은 WSSD에서도 크게 평가받는다. 남은 문제는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이다.

이러한 국제 추세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대책은 다양하(으)나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분권화 정책을 위한 가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책별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7-8년 간의 파트너십 구축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나라에 오늘의 가버넌스체계를 선도해낸 지방의제21 실천기구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